

##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김 홍 규\*\*

- I. 서론
- II. 사드 문제의 기원
- III. 4차 북핵 실험과 2차 사드논쟁의 시작
- IV. 사드 논란이후 국제관계
- VI. 결론

### 국문요약

이 글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문제가 이번 4차 북핵 실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불거진 배경,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대, 이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간 한반도 문제는 21세기 미중 복합적인 전략관계에서 협력의 상징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추후 중국과 보다 경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사드 도입의 이슈화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추후 북핵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전략 협력 안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을 깬 사드의 한국 내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다시 미중 간 갈등이 발화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주제어:** 사드, 미중 전략경쟁, 북핵 실험, 한중 관계, 북중 관계

### I. 서론

사드(THAAD)라고 불리는 종말 고고도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Theater Missile Defense: TMD)

\* 이 글은 필자가 2015년 4월 16일 최재천 국회의원실 주최 사드 관련 세미나, 2016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사드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 발전시킨 것이다.

\*\*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

에서 고층 방어에 해당하는데, 탄도미사일의 비행단계(추진, 중간, 종말)중 종말단계인 고(高)고도의 대기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sup>1</sup> 이 글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문제가 이번 4차 북핵 실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불거진 배경,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대, 이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사드를 둘러싼 한미-중러 간의 갈등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진행된 1월 6일부터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대북제재에 미국 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까지 약 50여 일의 시간을 소진하였다. 이 논쟁과정에서 한국 측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중국 중심적인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이해하거나 실제 그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중국은 사소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sup>2</sup> 이 논쟁은 실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경직성을 노출시키고, 한중 관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의 이러한 주장들 역시 지나치게 우리 중심적인 해석과 편견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에서 중국을 배제한 사고나 외교는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한중은 이웃국가이고, 중국의 영향력은 이제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흔히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전체 GDP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30%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무역규모는 우리 GDP와 거의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의 수준은 북한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또 하나 고려할 요소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경제의 구분이 이미

<sup>1</sup>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0460&cid=40942&categoryId=31746>> (검색일: 2016.4.20).

<sup>2</sup> 이와 같은 관점을 잘 정리한 글은 박휘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 편향,” 『전략연구』, 제23권 제1호 (2016년 3월); 박근재,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제23권 제1호 (2016년 3월); 박휘락,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 『국가전략』, 제21권 2호 (2015).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드체계 한반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은 최재천 의원 세미나 자료집, 『사드 모순』, 2015.4.16.; 김진향, “사드 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정육식, “사드, 북한미사일 막을 수 있나,”; 하주희,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고봉준, “21세기 미국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동맹 전략,” 『변화하는 한반도의 국방과 외교정책의 새로운 모색』, 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16).

정책적으로는 무너졌다는 점이다.

향후, 한국의 경제적·안보적 생존에 미치는 중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왜 사드의 한국 배치에 그리 격렬히 반응을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응한 방식이 합당했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성질의 분석은 아직 충분한 근거자료들을 찾을 수 없어 상당 부분을 추론, 인터뷰, 정황자료, 필자의 전문적 이해의 수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다. 최근 단일 외교사안 가운데 사드문제만큼 중국의 대외전략과 중미 관계의 변화,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드 관련 정책과 이를 둘러싼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정책의 변화,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중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대외정책 수립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크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와 4차 핵실험 이후 시기로 대별이 된다. 3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연미·화중·포북(聯美·和中·包北)이었다. 이 시기 우리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중 어느 일방으로 지나치게 경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문제 처리나 2014~15년 동안 일었던 국내 사드배치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이 기조를 잘 유지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도입 검토 발언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맹미·견중·압북(盟美·牽中·壓北)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가능하다. 2016년 사드 배치 논쟁은 그만큼 한국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안겨주었다.

4차 북핵 실험이후 한국의 외교는 대중 외교 측면에서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부담의 측면으로 보자면, 중국은 한국이 기존의 연미화중 기조에서 이탈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대미 편승외교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시진핑 외교의 특성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응할 방안을 이미 마련했을 개연성이 다대하다. 기회의 측면은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중국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고, 장차 일대일로 정책의 초점이 한반도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나 동남아, 남중국해 등지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제고시킨 것이다.

현재 한중 관계는 낙관도 비관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변 4차 북핵 실험 정국에서 한중 관계는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국내 적인 해석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이 사드 문제의 근원이 북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핵에 대한 강도 높은 UN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핵 국면에서 한중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중국은 사드 문제 논쟁에서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주공(主攻)은 미국을 겨냥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신냉전의 도래를 원하지 않으며, 한국의 상실은 시진핑 외교의 큰 손실일 것이다. 한국 역시 중국의 전략적 고민을 이해하고 사드 문제를 미중 사이의 갈등 국면으로 가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이익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중이 전략적 타협 국면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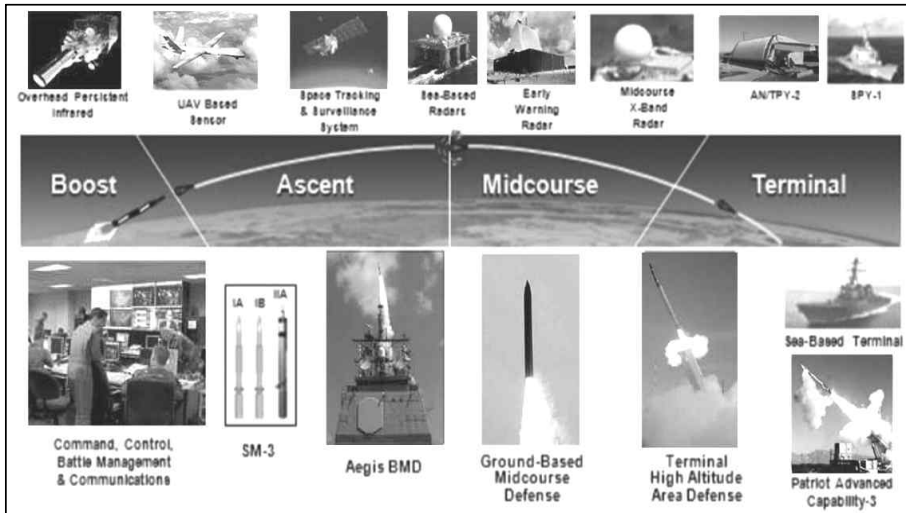
## II. 사드 문제의 기원

### 1. 사드의 개발 배경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1972년에 상호 방어무기체계의 구축을 포기하는 반(反)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협정(Anti-Ballistic Treaty)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냉전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각기 두 군데만 방어를 허용하였고, 이를 방어할 미사일 숫자도 100기 이내로 제한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무한정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방어가 어려운 군비경쟁의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이를 크게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sup>3</sup> 미국은 1991년 탈냉전의 상황에서도 이를 계승하기로 하였고, 1997년 구소련 소속의 4개국과도 이를 계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단일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힘과 역량을 확신한 부시 Jr. 대통령은 2002년 이 조약의 해체를 선언하였다. 어떠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완벽히 방어할 체계를 구축한다면 상대에 대해 결정적인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2년 11월 프라하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sup>3</sup> ABM 조약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Anti-Ballistic\\_Missile\\_Treaty](https://en.wikipedia.org/wiki/Anti-Ballistic_Missile_Treaty)> (검색일: 2016.4.20.).

<그림 1> 미국의 다층 방어미사일 시스템



출처: 미국 국방부. 현재는 아카이브로 이전되어 있는 것으로 나옴. <<http://search.daum.net/search?w=img&q=%EC%82%AC%EB%93%9C%20%EC%69A%94%EA%B2%A9%EB%AF%B8%EC%82%AC%EC%9D%BC%20%EC%B2%B4%EA%B3%84&docid=33b-jloIQfU3e0xRbT&DA=IIM>>에서 재인용.

미국은 상공을 격자망식으로 구획 짓고 이를 연결시키는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다층에서 요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대기권 밖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와 그 하부에서 요격하는 사드, 그리고 저층 방어용인 Pac-3등이 결합한다면 미국은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2차 보복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적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의 도입은 기존의 SM-3와 Pac-3의 간극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방어체계이다. 사드는 지상 이동 및 공중 수송이 용이하고, 적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1차 요격 후 확인하고, 다시 2차 요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1987년에 중층 미사일 방어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이후 사드의 개발을 미국의 전구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핵심계획중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방어체계가 생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바로 미국이 2002년 ABM(Anti-Ballistic Missile Treaty) 조약의 해체를 선언한 것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미국 부시 Jr. 행정부는 사드를 생산하여 다층방어망 구축을 추진하였고, 2007년에 이르러서 사드 생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미 육군은 생산 이듬해인 2008년 5월 사드를 배치하기 시작해 2015년 까지 총 5대의 사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드는 각기 8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6량의 발사차량과 지상 레이더, 전투관리, 지휘, 통제, 통신, 정보체계(BM/C3I)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 요격고도는 대체로 40~150km로 상층부 대기권과 대기권 밖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고도이며,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인 AN/TPY-2형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하고, 미사일의 방어 반경은 약 200km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이는 이미 배치된 종말 저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Patriot)가 불과 30km 고도까지 방어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중층으로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2. 국내 1차 사드 논쟁의 시작

국내에서 사드 배치논쟁이 시작된 것은 2013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2014년경부터 소형화한 북한 핵무기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이나 ‘무수단’에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터였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하여 김무성, 원유철, 나경원 의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 국내 영향력이 큰 보수 유력 인사들이 이를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배치를 지지하고 나섰다.<sup>5</sup>

한미 간에 사드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2008년 당시 이명박-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스 회담이후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전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강하게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사드의 생산과 배치를 추진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실제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로의 편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당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도입 문제는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모임에서 미국 당국에

<sup>4</sup> 미국 사드체계의 발전에 대한 분석은 朱風雲, “美國陸軍反導利器: “薩德”系統發展,” 『軍事文摘』 (2016.4.), pp. 32~35.

<sup>5</sup> 이에 대한 신문보도는 <[http://www.ytn.co.kr/\\_ln/0101\\_201503251955149159](http://www.ytn.co.kr/_ln/0101_201503251955149159)>;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84298\\_19842.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84298_19842.html)>; <[http://news.donga.com/Issue/List\\_00010000000013?p=151&yymd=&m=&=>](http://news.donga.com/Issue/List_00010000000013?p=151&yymd=&m=&=>)> (검색일: 2016.4.21.).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를 도입하도록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재차 부각되었다. 한국 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이 크게 흥미를 끈 것은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거듭함으로써, 한국 측의 우려가 커졌다는 배경이 존재했다. 기존의 PAC-2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핵미사일 방어에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동시에 일본이 2013년 9월 교토에 고고도 요격 미사일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미일의 압력이 더 가중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의 기존 입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드 체계의 도입은 비용 대비 효용성이 너무 낮아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를 구축하여 도발 징후가 있을 시 이를 단기간에 무력화하는 킬체인으로 그 위협을 상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판단의 이면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수단 중 현실적으로 위협한 것은 서울 북방에 위치한 다연장포이며,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그 비행고도가 낮아 사드로는 방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은 다층 방어수단을 연구 중이라 공개하였다. KAMD 체계에 요격고도 100~500km 이상인 고고도의 방어체계인 SM-3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재차 발생하였다. 김 장관은 다음날 이를 부인하였고, 상대적으로 중고도인 사드 체계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sup>6</sup>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삼국 협력의 대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문제를 언급하여 이 부문에서 한국에 재차 압력을 행사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9월 개정된 EPAA(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를 통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독일에 지휘통제체계를 위치시키고, 터키에 사드, 2015년 루마니아에는 지상 기반 SM-3를 배치하여 남유럽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2018년 폴란드에도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여 동유럽을 포함하는 방어체계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 명분으로는 이란의 점증하는 핵무장과 미사일의 위협을 들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방어 체계 구축을 우선 시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강한 반발로 이 계획

<sup>6</sup>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6574/1>> (검색일: 2016.4.15.).

의 실행을 결국 연기하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게 되자 그 명분과 더불어 배치 계획은 무기한 연기상태가 되었다.

중국은 미국이 동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7</sup> 미국 측 군부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측에 사드 도입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사드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점증하였다. 중국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CNKI와 복단대 도서관의 목록을 검사한 결과, 사드 체계에 관련된 분석 글은 2013년에는 부재했지만, 2014년 4편, 2015년 32편, 2016년 52편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글들에서 중국 측은 미중의 전략경쟁 차원에서 사드의 배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sup>8</sup> 한국에서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계 구축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2012년 일본에 AN/TRY-2라는 X 밴드 레이더 배치를 시작으로 한국에도 이 체계를 확장하여 배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 사드배치가 비단 한국에 끝나지 않고 일본, 필리핀, 심지어 대만에까지 배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sup>9</sup>

2010년대 들어 재정 감축을 해야 하는 미국 정부나 국방부의 입장에서 이런 미사일 방어망을 전 지구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막대한 부담이었다. 적어도 한 포대 당 배치비용이 1조원에 달하여, 그 운용비까지 더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배치 추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군산복합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도 존재하며, 향후 막대한 비용을 동맹국이나 배치 지역에 부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트럼프(Donald Trump)는 동맹국의 추가 방위비용 분담 강화를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최근까지 미사일 방어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해 왔으며, 미국의 보수층과 방산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시스템의 구축에 들어가는 고비용으로 인해 미군은 2015년 현재 당초 예정보다 낮은 수준인 5대를 일단 구매하였다.

<sup>7</sup> 張相國, “美在韓部署“薩德”分析,” 『兵器知識』 4期(2016), p. 55.

<sup>8</sup> 최근의 대표적인 글들로는 王俊生, “新時期發展中韓安全合作的意義, 障礙與方向,” 『東北亞學刊』 第1期, (2016.01); 獨孤九段, “美韓的薩德反導系統, 對中國威脅到底有多大,” 『中國經濟周刊』 (2016.2.22); 劉江永,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東北亞論壇』 第3期(2016.04); 張良, 美軍半島“舞劍,” 意在構築“亞太反導網,” 『生命與災害』 (2016.3); 金龍, “朝核危機, 中國不出賣朋友也絕不護短,” 『東北之窗』, 2016/3A.

<sup>9</sup> 鄒治波, “美國謀求在韓部署“薩德”系統的戰略意涵,” 『當代世界』 (2016.4), p. 26.



### 3. 한국 정부의 신중한 입장 견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고도 10~1,000km의 하층, 중층, 상층의 전체 과정 방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KAMD는 50km 정도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하층 방어 체계라 할 수 있다. 현 방어 체계의 단점은 북한의 미사일이 음속의 5~8배로 낙하하기 때문에 저고도에서 요격할 시간이 수 초 밖에 되지 않아 대응 능력이 낮고, 요격 영역이 제한적이며, 북한이 중고도에서 자탄을 분리하여 공격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할 경우, 북한 미사일을 중고도와 저고도에서 중첩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더 고고도인 SM-3보다는 사드 도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동이 가능한 해상발사 요격체계인 SM-3가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지상발사 요격체계인 사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로 사드배치 문제에 접근하였다. 국방부는 예상되는 중국 측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 역시 보여주었다. 반면, 미국의 군부와 국방부 인사들은 사드를 한국에 도입하고 싶어 하는 속내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었다.<sup>10</sup> 2014년 9월 로버트 워크((Robert Work)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의 배치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에는 존 커비(John Kirby) 미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발언했다가 사흘 뒤 한국과 공식 협의나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2015년 3월 미 합참의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아시아담당 부국장(공군 준장)은 최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미일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마틴 뎀프시(Martin Dempsey) 미 합참의장이 2015년 3월 26~28일 방한 중 (최윤희 합참의장과) 사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1</sup> 스틸웰은 “사드가 지역방어의 핵심 수단으로 한국 안보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해 미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 역시 2015년 5월 18일 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처음으로

<sup>10</sup> <<http://news.donga.com/Issue/List/00010000000013/3/00010000000013/20150323/70264822/1>> (검색일: 2016.4.15).

<sup>11</sup> 미국의 소리(VOA) 방송 2015년 3월 22일자 보도.

로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드 체계를 비롯해 다른 수단들에 대해 언급하였다.<sup>12</sup>

박근혜 정부하에서 한국 당국은 미국과 엇박자가 나면서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한국 측은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떤 공식 협의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여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취했다. AN/TPY-2 레이더 대신 탐지거리가 600~800km 정도인 TBR 레이더로 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사드 미사일 포대의 AN/TPY-2 레이더는 고정형이고, 그 방향이 북쪽을 향하는 것이라 중국을 탐지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시하였다.<sup>13</sup>

사드 미사일 자체도 중국이 위협될 만한 유효거리나 고도도 아니며, 작전 범위가 동아시아가 아니라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관진 장관은 사드 배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sup>14</sup>

#### 4.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도입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그것은 중러를 겨냥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2016년 4월 29일 중국 왕이 부장은 러시아의 로브로프(Sergey Lavrov) 외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단호한 태도로 제시하였다.<sup>15</sup>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해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 한국의 방어수요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동시에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장을 더욱 촉발시키고, 역내 전략균형을 파괴한다. 유관 국가들은(한국을 포함: 필자 강조) 중국과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과 정당한 주장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sup>12</sup> <<http://news.joins.com/article/17932571>> (검색일: 2015.10.16.).

<sup>13</sup>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60415278298330&type=2&sec=finance&pDepth2=Qdiplomacy>> (검색일: 2016.4.15.).

<sup>14</sup>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1815440156236>> (검색일: 2016.2.15.).

<sup>15</sup> <<http://www.fmprc.gov.cn/web/wjzbzd/t1359733.shtml>> (검색일: 2016.4.25.).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성격을 띠는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는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문제시하는 것은 사드 미사일보다는 미국이 운용할 X-Band 레이더 체계였다. 이는 탐지거리가 1,000km 이상 2,000km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어, 서해안 쪽에 배치되는 경우,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 텐진, 다롄은 물론이고, 우루무치와 라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의 주요 도시 주변의 군사시설과 대륙간 탄도탄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초기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sup> 중국은 사드를 한국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 필요에 따라 대중국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한국이 억제할 수 있는가에 회의적이다. 일단 사드 체계가 한국에 도입되면 한국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그 운용에 있어 한국이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미국의 EPAA판 동아시아 체계의 확대를 돕거나, 편입되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사드 도입과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를 겨냥한 미일 중심의 동아시아 MD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교토에 X-Band 레이더를 설치하고 미사일 방어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알려진 2013년 9월 23일 논평을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고, 북한 핵 방지와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거나 집단 협력을 펼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글로벌 전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sup>17</sup>

중국은 시진핑의 방한 직전인 지난 2015년 5월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내 미사일 방어체제논쟁이 재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중국 군부의 대표적인 매파인 인취(尹卓) 전 해군 제독은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 한국이 중국의 선제 핵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sup>18</sup>

한국 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 측 역시 강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미러 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갈등과 긴장이

<sup>16</sup> 張相國, “美在韓部署“薩德”分析,” p. 55.

<sup>17</sup>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079427.shtml](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079427.shtml)> (검색일: 2016. 4.15.).

<sup>18</sup>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5/201408050202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5/2014080502021.html)> (검색일: 2016. 4.12.).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욱 증폭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외교부 논평을 통해 사드배치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계 전개 지역의 추가 확대와 그 시스템의 한반도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태전개는 불가피하게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 지역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배치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 왔다. 2015년 3월 24일,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 도입이 지역 내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군사 정치적 상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러시아 외교부 역시 성명을 발표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sup>19</sup> 이에 대해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과 주 러시아 한국대사는 다 같이 사드 배치는 러시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드 도입은 우리 정부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 5. 1차 사드논쟁의 정리

국내에서 보수적인 성향이나 안보라인의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격의 범위와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사드체계의 도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사대주의의 소산이라는 대단히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는 주장들도 널리 개진되었다.<sup>20</sup> 심지어는 미국의 사드 도입의 요구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정부보다 더 걱정하는 참으로 민망한 충고”로 크게 환영하였다.<sup>21</sup>

한국 국방부는 2015년 5월 29일 대변인을 통해 미군내의 사드 체계 도입은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 및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형 사드급 요격미사일을 국내에서 개발하겠다고 공표하여 사드 논쟁을 일단 불식시켰다.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새로운 KAMD체계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고도

<sup>19</sup>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42300265&code=9103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42300265&code=910302)> (검색일: 2016.2.1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48>> (검색일: 2016.4.15.).

<sup>20</sup> <<http://news.donga.com/Issue/List/0001000000013/3/0001000000013/20150313/70118694/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395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5/2016022503955.html)> (검색일: 2016.4.12.).

<sup>21</sup>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61201033037191002>> (검색일: 2016.2.15.).

60km이상 요격), PAC-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구성되며, 2022년까지 이를 실전 배치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한국은 이후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답변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사드 배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정책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논쟁이 일단락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은 여전히 유지하였다.<sup>22</sup>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에 입각한 중견국가 외교의 일단을 잘 보여주었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4차 북핵 실험과 2차 사드논쟁의 시작

#### 1.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적 선택

북중 관계는 ‘북중 우호조약(1961)’에 따라 ‘군사 동맹’ 성격의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점차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상국가 관계’로 전환중이다.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관계는 중소의 대북 내정개입(1956), 문화대혁명 초기(1966~1969) 시기, 한중수교(1992) 시기 이후, 상호 간의 불신이 가장 극대화되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모란봉 악단이 북경을 친선 방문하고 있던 2015년 12월 10일에 북한이 수소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은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 당분간 추가적인 도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측을 크게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모란봉 악단 철수사태(2015.12.12)이후, 중국은 모란봉 악단의 재방문 추진 등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 2016년 1월 6일 북한은 돌연 핵 실험을 단행하였다. 또한 2016년 2월 2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판공실 주임이 방북한 당일, ‘광명성 4호’ 위성으로 명명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계획을 공표하고 결국 이를 2월 7일 실시하였다.

북한은 핵실험 직전 미국 측과 평화협정 문제를 놓고 비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측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접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 전통 우방이었던 중국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당분간은 미국이나 한국이

<sup>22</sup>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5/0200000000AKR20150225139300001.HTML?input=1179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35830&code=61111911&cp=du>> (검색일: 2016.2.15.).

새로운 정책을 취하기 어려운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역시 내부 경제사회 환경의 악화로 외부적인 개입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 주어진 “연휴기간” 동안 일단 핵무장을 완성하고 실전배치하여 자신의 협상력을 크게 제고한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sup>23</sup>

북한은 중국의 이해와 관련한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국을 배려하고 있지 않고 독자적인 이해에 입각해 결정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집권하자마자 핵문제는 더 이상 6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미중변수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논리로 핵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이미 강대국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게 상당히 곤혹스런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산 질서를 수호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할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는 희망과 더불어 북한 불안정과 붕괴시 초래할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딜레마는 북핵 실험 바로 다음날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 인터넷 망인 국관전연통신(國關前沿通訊)에서 발표한 시진핑(習近平) 시기 새로이 분화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여섯 가지 다른 견해에서 잘 드러난다.<sup>24</sup>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주류는 ‘현상유지’자들이었으나<sup>25</sup> 이제 점차 ‘제한적 제재강화론’자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 포기론이나 강력한 제재시행을 주장하는 무리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극소수만이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 더구나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를 보자면 중국 대 한반도 정책의 기반이 변화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해석해도 될 듯하다. 북한은 중국 외교에 있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특수 지위를 누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sup>26</sup>

<sup>23</sup> 장튀성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부 주임 역시 필자의 견해에 공감, 2016년 4월 26일 인터뷰.

<sup>24</sup> <<http://www.dooo.cc/2016/01/40356.shtml>> (검색일: 2016.4.15.).

<sup>25</sup>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전략사고를 세 부류로 정리한 글은 Heu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XII, No. 1, Spring 2010.

<sup>26</sup> 북중 관계의 수식어로 여전히 사용되는 ‘전통적’이란 개념은 더 이상 특수 용어가 아닌 과거 사회주의를 공유한 국가들인 알바니아, 베트남, 체코와 같은 국가들에게도 붙여지는 일반명사화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개념에 대한 연구는 김홍규, “중국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2호 (2009) 참고.

&lt;표1&gt;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

범주	수량	주요 지지자
무조건적인 북한 지지	1	리둔치우
북한 포기	5	자오추, 덩위원, 왕홍광
현상유지	26	루안중저, 평광취엔, 류장용, 타오원자오
제한적 제재강화	21	스인홍, 주펑, 셴당리, 웨리타이
강력한 제재 시행	6	장렌구이, 자칭귀, 리카이성, 왕하이판
정치 현실주의적 접근	11	옌쉐통, 진창이, 위앤쉐저, 왕이웨이
관리 위주 혹은 무시	불명	일대일로 추진하는 자유주의자

출처: 시진핑 집권기인 2013~2016년 3월 현재까지 한반도 관련 저술과 중국의 전통적인 전문가들 총 70인 에다가 일대일로 추진자들의 사유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임.

시진핑은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북한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평가하면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하도록 중국 조야에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구성하면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할 마지노선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sup>27</sup>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기존의 당 대 당의 특수관계를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 보다 노력하게 되었다.

## 2. 북핵 실험 직후 한국의 정책

정부의 3NOs 정책 표명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한국 내 사드배치 문제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돌연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 결과 대북 제재 이슈는 한동안 뒤로 밀리고, 오히려 사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한미·중러 간에 신경전과 알력이 증폭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사드문제는 거의 당파성을 띠게 되었다. 대체로 정부여당은 강력히 찬성하고, 야당이나 재야는 반대의 입장에 서면서 객관적 성찰보다는 마치 도그마화하는 양상을 띠었다.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사드 배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중국에게는 이것이 아마도 공개

<sup>27</sup> 필자의 2016년 2월 19일 북경 인터뷰.

적인 압력으로 비취졌을 것이다. 이는 동유럽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동유럽에 미국이 미사일 방공망을 구축하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데 미국과 협력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사드배치 명분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이 경험은 한국 사드배치의 근원인 북한의 핵무장을 중국이 적극 나서서 억지하고 제거해야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국의 미온적인 북핵 대처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중국의 협력만 있으면 북한은 굴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었다.<sup>28</sup>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박근혜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본질문제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이 반발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드 문제를 왜 이리 빨리 제기했는지에 대한 다음 몇 가지 가설이 필요하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특히 시진핑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간 한국 측의 많은 노력과 중국 측의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 언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핵 실험 국면에서 중국 지도부의 침묵과 소통부재는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신은 북한의 위성발사 직후 2월 5일 박근혜-시진핑과의 통화에서도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sup>29</sup> 둘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거의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북한이 김정일 시기부터 추진해 온 한반도 무력통일을 위한 3일 대전(大戰) 통일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인식이다.<sup>30</sup> 그리고 이를 실행할 시점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중국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불신 역시 깔려 있다. 셋째, 중국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도 작용한다. 한국전쟁의 경험, 냉전적인 사유, 북핵문제 대응과정에서 중국에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 최근 중국의 한국의 경제 생존 공간 무(無)배려, 해양경제회정 회담에서 보여준 중국의 경직된 태도 등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강화시켰다. 넷째, 최근 한미동맹 약화와 동맹방기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다. 일본이 주축이 된 대중 경사론이 미국의 조야에 설득력을 얻고, 최근 2016년 발간된 미국 CSIS 리포트에서 암시한 바처럼<sup>31</sup> 미일동맹의 강화 추이에 따른 한미동맹의 약화 우려는

<sup>28</sup> 이러한 논리는 민간 전문가에서도 널리 발견되는 데, 그 한 예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7/201506270008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7/2015062700085.html)> (검색일: 2016.4.14.).

<sup>29</sup>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45>> (검색일: 2016.2.15.).

<sup>30</sup> 이 북한의 무력통일 전략은 황장엽의 망명시 공개한 것으로 한국의 보수적인 안보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이러한 계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개연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 의한 카쓰라-태프트밀약(1905), 애치슨라인의 설정(1950)의 악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위협이 이처럼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보력의 확보가 절실했던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지닌 대북 정보력 운용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정보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한국 외교안보 정책라인의 인적구성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미동맹 중심의 사고와 이해관계 구성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인적구성, 여기에 북한 붕괴론은 전제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담지자, (국수적) 민족주의자들이 결합하여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 사이에 한미동맹 가치에 대한 사유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공통점은 북한과 중국의 이해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사고가 존재한다. 일곱째, 또 주목할 논점은 4월 총선 활용론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 북풍의 활용은 보수정당에게는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단, 사드문제는 북풍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 엘리트들의 인식과 경제계나 일반인들의 이해관계 사이에 괴리 가능성 존재한다. 여덟째 고려는 한국의 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강화한 후, 미국의 전략핵 반입 등을 설득할 공간을 확대한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장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현 국면을 주도하는 집단들도 다양한 이해를 지니고,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외양적으로는 청와대 안보라인에서 주도하고 있는 듯하나, 더욱 가장 강한 목소리는 상위의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는 보수민족주의자, 보수 원로 그룹에서 제기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월 25일 MBC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며 “군사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그런(미사일 요격)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상황 관리 노력도 병행하였다. 갈등 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중국과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방부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사드 시스템의 제한적인 역할, 한미동맹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

<sup>31</sup> Michael Green, Kathleen Hicks, Mark Cancian,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CSIS (January, 2016).

회 연설에서 다시 사드 도입 및 강력한 대북정책의 추동지를 드러내었다.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하고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임을 암시하였다. 최근 남북한 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었다.

북핵·미사일 실험 국면에서 한국이 취한 강력한 한미동맹 강화, 대중(中) 민족주의 태도, 사드의 조기 도입 정책은 일단,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케리-왕이 간의 북핵 제재에 대한 합의와 미국의 사드 관련 유연한 태도 채택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절박감과 위기의식은 이번 4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 동인이며 이는 이번 UN 결의안 2270호로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사드배치를 조속히 추진하며, 핵우산 확장 및 (가능하다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한국을 미·일·한 삼각안보협력 체제에 편입시키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미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초래한 상황에 연루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일각에는 이러한 한국의 강경책이 박근혜 정부의 국내 총선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안보그룹이 지니는 문제의식은 이를 넘어선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핵무장화 추진 논의가 점화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은 결국 핵무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보수를 넘어서서 진보 진영에서도 설득력을 얻는 추세이다. 아직 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안보지원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한국의 여론은 급격히 이에 경사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비용에 대한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 조차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3. 중국의 북핵 실험과 사드에 대한 대응

중국은 2016년 1월 6일 북한 핵실험 당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sup>32</sup> 그 내용은 3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외교부

<sup>32</sup> 성명 전문 <<http://www.fmprc.gov.cn/web/zyxw/t1329851.shtml>> (검색일: 2016.4.15.).

성명과 거의 유사하다. 3차와 마찬가지로 핵확산을 방지(防止)한다는 보다 행동 지향적인 언명(1~2차 실험직후에는 핵확산을 반대(反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각 측이 냉정을 유지하면서 대응해야한다는 구절이 빠져, 중국 역시 대단히 불쾌해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중국은 미래에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여 북한이 의도하는 바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2016년 1월 8일,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과 서로 소통을 유지할 것을 희망하면서 동시에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안정과 평화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다 중요하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도 생략할 수 없다고 제한을 두었다.<sup>33</sup> 이러한 신중한 입장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희망하는 한국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4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는 3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대단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은 2013년 3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는 기존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대북 접근과는 다른 과감한 대북 압박전략을 주도하여 중국 내 전문가들조차 당혹하게 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그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는 더 강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sup>34</sup> 시 주석의 신중한 행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요인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어 가는 국면에서 정책 결정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를 미중 관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인식하였다.<sup>35</sup> 두 번째, 한국 내 사드 도입문제가 제기되자 시진핑 주석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여부와 이 의제를 같이 조율하려 했을 개연성이 크다. 즉, 북핵 제재 및 사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 하였다. 세 번째,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추진의 강화움직임을 고려하였다. 네 번째, 중국의 경제문제와 사회 불안정 문제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중국 내 군부개혁이 중요한 변수였다. 군부개혁으로 인해 군부 내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양보를 하거나 미온적으

<sup>33</sup> <<http://www.fmprc.gov.cn/web/wjbzhd/t1330516.shtml>> (검색일: 2016.4.15.).

<sup>34</sup> 이는 시 주석이 박대통령에게도 한 언급이며, 필자가 2015년 중국의 다양한 안보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sup>35</sup> 畢穎達, “深化中韓戰略合作夥伴關係的空間, 挑戰及應對,” 『東北亞論壇』 2015年 02期; 仇發華, “新時期中國朝鮮半島戰略調整的變化, 動因與趨勢,” 『國際關係研究』 2014年 06期.

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시 주석은 상기의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북핵 실험 발생 초기국면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회피하였다. 쉽사리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군부개혁 상황과 관련한 문제는 시진핑 자신의 권력 향배와도 관련한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중국 군부와 안보라인의 우려를 해소하는 선에서 북핵 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본격 제기하여,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그 자체보다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차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sup>36</sup> 더구나 미국의 북핵정책은 미국의 전략이익을 위한 현상유지와 관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는 북한의 제재와 고립, 핵개발의 억지 등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하였다.<sup>37</sup> 중국은 북핵 문제를 미중 전략관계의 구도에서 인식하고 대응한다는 중국 외교정책의 기초를 다시 확인하였다.

한국 측은 이번 4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 사드 도입문제를 본격 제기하면서, 미국의 영향력과 힘을 빌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시도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끌어내려 하였다. 중국은 북핵 실험 발생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문제 제기와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드 수용검토 발언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한 편승전략을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택했다고 해석했을 것이다. 북핵 실험이후 한국의 대응을 중국이 설정한 중국 국가이익의 마지노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설정한 마지노선은 미중 간의 북핵 제재 협상에서 잘 드러나는 데 첫째, 제재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 내 사드 도입은 불가하다. 셋째, 비핵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뤼웬(羅援) 전 군사과학원 소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38</sup> 첫째, 압록강을 넘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넘어오는 상황은 불가, 한반도의 안정 유지 둘째, 중국의 국가 안전이해 고려 셋째, 북한 핵무기 실전 배치 억제 및 핵 포기시 충분한 보상의 실

<sup>36</sup> 이에 따라 중국의 주요 관영매체들은 북핵 실험 직후 북핵보다는 미국이 제기한 중국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http://www.guancha.cn/politics/2016\\_01\\_07\\_347317.shtml](http://www.guancha.cn/politics/2016_01_07_347317.shtml)>; <[http://www.guancha.cn/america/2016\\_01\\_08\\_347327.shtml](http://www.guancha.cn/america/2016_01_08_347327.shtml)>;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1/8338885.html>> (검색일: 2016.4.15.).

<sup>37</sup> <[http://news.ifeng.com/a/20160108/46987307\\_0.shtml](http://news.ifeng.com/a/20160108/46987307_0.shtml)> (검색일: 2016.4.15.).

<sup>38</sup> 羅援, “中國在半島的安全關切應得到各方重視,” 『軍事文摘』 2016年 4期.

시 넷째, 제재를 실시하되 과도한 제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한 직후이다.<sup>39</sup> 중국은 1.5트랙 차원에서도 향후 한국의 사드 도입은 중국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신호로 인식하고, 한중간 신뢰를 엄중히 손상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대가를 반드시 한국이 치러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였다.<sup>40</sup>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6년 1월 29일,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유관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그 어떤 국가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중국은 2월 7일 사드의 한국 내 배치관련 한미 간 협의 결정이 알려지자 즉시,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다.

다만, 한국과의 갈등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를 과격으로 몰아가지는 않겠다는 원칙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발간한 사드 관련 중국의 문건들을 보면, 한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비판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대체로 인정하고 한국의 입장을 가급적 중립적으로 전달하려하면서도, 중국의 국가이익의 침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과거에는 북핵 실험의 근본 원인을 미국의 대북위협에서 찾았던 데 비해 이번에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를 동시에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1</sup> 북한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차이를 활용하여 계속 핵개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흥미롭다.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는 5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다자 외교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동시에 미국에 대해 군사적·외교적인 측면에서 병행하여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우선 환구시보는 한국의 사드배치가 현실화되면 상응한 군사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여, 최초로 군사행동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2월 12일 왕이 부장은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

<sup>39</sup> <[http://www.ytn.co.kr/\\_ln/0101\\_201601262158307071](http://www.ytn.co.kr/_ln/0101_201601262158307071)> (검색일: 2016.4.15.).

<sup>40</sup> 2016년 1월 23일 개최된 제2차 아주대 한중정책학술회의 중국 측으로 참석한 왕이성 중국군사과학원 아태부 주임과 장튀성 중국국제전략기금회 학술부 주임이 일관되게 강조한 내용이다. 동시에 환구시보(環球時報), 2016.1.27 사설 참고.

<sup>41</sup> 환구시보의 북핵실험 당일 인민대 진찬룡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서 엿보이며 후에 중국 정부 역시 유사한 입장을 개진.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6-01/8327218.html](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6-01/8327218.html)> (검색일: 2016.4.15.).

고, 한반도 정세를 명분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는 “항장이 칼춤을 추는 것은 그 뜻이 유방에 있다(項莊舞劍 意在沛公, 司馬昭之心 路人階知)”라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미국이 사드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미국 측에 한국에 사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번 사드 논쟁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존중해줄 것이란 신뢰는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을 중국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경일 것이다. 다만, 중국 역시 북핵문제로 인해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불원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과 갈등 관계로 전환하는 것 역시 억제하려 노력 중이다. 단,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해 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측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의 원칙에는 찬성하고, 북한에 대한 “용단 폭격론” 대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사안에 대한 “정밀타격(제재)론”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해결책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북미대화 재개 등 현 경색국면의 탈출구를 제공해줘야 중국 역시 대북 설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내 사드에 대한 입장은 비교적 단일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중국 내에서도 사드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외교라인과 안보라인의 차이점도 동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라인은 보다 유연한 입장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안보라인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추귀홍(邱國洪) 대사의 2월 23일 사드 도입이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발언도 아마 이러한 압력을 받는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sup>42</sup>

중국이 사드에 대한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면에는 크게 다음 일곱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냉전적인 사고에 입각해 한국에 미군과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다. 따라서 실제 사드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합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둘째, 한미동맹의 이완책이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국가 외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거점국가로서 한국을 중시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을 억지하면서 한

<sup>42</sup>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3/0200000000AKR2016022315290001.HTML?input=1179m>> (검색일: 2016.5.3.).

국의 보다 중립적인 태도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군사기술적 위협 때문이다. 백두산 배후에 위치한 중국 미사일 부대에 대한 사드 레이더의 운용을 우려한다. 한국에 배치된 레이더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을 것이고, 유사시 대중용 레이더로 신속히 전환이 가능하며 사드 레이더는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는 1기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2기~3기가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 사드 레이더가 더 배치된다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sup>43</sup> 넷째, 미중 전략 경쟁에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대중 및 대러 전략에 있으며 미국은 기존 동맹들을 이러한 목적에 활용하려 노력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전략균형의 훼손이다. 강대국 간에는 일정한 전략 균형의 상태가 존재하고 이를 추구하는 데, 미국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존재해 왔던 미묘한 전략 균형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중국의 안보 불안を 가중시켜 군비경쟁, 갈등 악화의 수순을 밟게 되리라는 것이다.<sup>44</sup>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돌파하기 위한 미사일의 수량 증가, 대응하는 무기체계의 배치, 전략 무기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sup>45</sup> 여섯째, 사드는 중국의 일본이나 서태평양상의 미국 영토 도서들을 방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일본과 서태평양상의 미국 도서들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 부대는 동북부에 다수 배치되어 있다. 또 양안 지역에서 군사 충돌시, 중국의 단·중거리 미사일로 주한미군을 제할 수단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의 군부 개혁이 진행 중에 있고, 군사력 건설 중에 있다. 사드 문제는 군부의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관심과 군사비 증액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시진핑 역시 중국 군부나 안보라인의 견해와 이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국내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아마도 역순 요인으로 중요했을 것이다.

<sup>43</sup> 張相國, “美在韓部署“薩德”分析,” p. 56. 그리고 첫 1기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다음 기부터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sup>44</sup> 최중건 교수 시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2336.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9071.html>> (검색일: 2016.5.3.).

<sup>45</sup> 중국의 잠수함 발사 SLBM 초기 탐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劉江永,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p. 9.

## IV. 사드 논란이후 국제관계

북핵 실험과 사드관련 대립국면에서 드러난 현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은 한국이 희망하는 북한과 5자의 구도는 아니며, 그렇다고 언론이 추정하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양자 세력구도도 아니었다. 현재는 과거와 차별되게 한·미·일, 중러, 북한의 3각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관건은 중러를 어느 쪽으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북핵 실험이 진행된 후 거의 한달 여 만인 3월 2일 유엔 결의안 2270호 채택으로 일단, 전례 없이 강한 북한 제재국면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이 주장한 바대로 미중은 이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추후 협상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합의한 점이다. 동시에 중국의 주장대로 민생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제한적인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후 한미의 사드 도입 논의, 한중 간 깊어진 불신 등 변수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 제재의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북핵 실험 국면을 미중 전략적 경쟁의 국면과 분리시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본격 제기되면서, 북한 제재이슈는 미중 전략 경쟁의 문제로 전화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중국은 보다 광의의 그리고 장기 전략적인 맥락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 UN 제재 결의안 2270호가 결국 미중 간의 전략적 타협의 차원에서 다뤄진 것은, 향후 한국 외교에 다시 어려운 그림자를 던져 주고 있다.

### 1. 한중 관계

시진핑 시기 중국은 자신의 이해에 반해 한국이 주도적인 전략적 선택에 의해 자신에 적대적인 정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 반드시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정치문화에 부합하고, 동시에 시진핑이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함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이해를 침해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



가 분명한 중국의 새로운 주변국 외교정책은 한국이 감내할 비용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하고 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경제보복이다.<sup>46</sup> 이는 저강도이면서, 즉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면서도 한국이 취약한 부분을 활용할 것이다. 그 예로 첫 번째는 경제부문이다. 지난 현대차의 충칭공장 인가 지연의 경우처럼 의도적이던 아니던 협의 처리의 지연, 연기, 취소, 거부 등 다양한 형태로 교묘히 나타날 것이다.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가 큰 영역이 표적이 될 개연성이 크다. 중국 방한 관광객 수의 급감도 예상할 수 있는 대응이다.

두 번째는 사회정서적 대응이다. SNS상의 한국 비난 허용이나, 한중간의 갈등 이미지 유포 허용, 왜곡된 이미지의 유포, 한국 드라마나 문화 활동의 억제 등 한국에 대한 대중정서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인 형식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무차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군사적인 보복도 가능하다. 그 예로는 방공식별구역의 무력화와 기존 한중 해상경계의 무시, 이어도 방면에 중국 해안경비정 진입 등이 그 리스트에 있다. 중국이 취할 행동은 한반도 근해에서 군사연습도 있다. 재난구호나 기타 해적 활동 퇴치, 혹은 정례적인 군사연습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점차 그 근접도와 민감도를 높여 갈 것이다. 이는 중국이 현재 북한을 압박할 때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사시 한국 내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군사적 타격방안 설정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고 압박할 수 있다. 단, 현재 중국 군부는 대개혁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후 5년 간은 실제 무력충돌이나 작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점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일 것이다.

환구시보는 이미 2월 16일자 사설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시 북중 변경지대에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 배치시키고 군비경쟁과 대치를 강화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서 한국은 강대국의 경쟁에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들어 가장 강한 경고를 말한 바 있다. 동시에 유럽의 경험을 들어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위협까지 하였다.

중국이 꺼내들 다음 카드는 북한 카드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북중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다. 필요한 경우, 러시아와 공동

<sup>46</sup> 최지영·김홍규, “사드 도입논쟁과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 아주대 China Watching 제14호 (2016.4).

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개발 프로젝트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낮은 차원의 대북 군수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단, 현재 중국이 UN 제재 준수와 북한 미사일 및 핵개발에 들어가는 물품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나, 아마도 상황 악화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한 통제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한중 간 전반적인 대립과 충돌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다자무대나 현안에 대한 중국의 사보타주가 진행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중국은 2014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 국책기관 합동 전략 대화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단행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7</sup>

단, 현재 중국의 전략이나 태도로 볼 때, 북핵문제로 한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동북아에 신 냉전구도의 형성을 희망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이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응전을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상기 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를 먼저 감안한 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당장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대립국면을 초래하기보다는 일단 관망과 관찰을 위주로 하고,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추후 행동을 취할 명분을 쌓을 것이다.

다만,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강화될 추세에 있고, 사드 문제로 인해 향후 미중이 갈등할 경우, 한국 역시 연루되면서 중국과 갈등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로서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리 저장도의 제재라도 중국의 보복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과 갈등 시 반드시 출혈을 감당할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최상의 방법은 갈등하지 않고,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상호 눈높이를 맞춰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다.

## 2. 북중 관계

당분간 냉각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는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일단은 고강도 대립정책 이후, 중국의 한반도 딜레마를 활용하면서, 대대적인 대중 유화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북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유인할 개연성이 다대하다.

<sup>47</sup> 당시 참석자의 전언.

북한은 이미 지난 1월 28일 최선희 6자회담 부대표를 중국에, 29일 박명국 외교부 부상을 러시아로 보내 북핵 실험 정국 이후 파생된 한중, 미중 균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북 제재 수준의 가늠 및 완화, 북한 입장의 전달 통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2월 2일 북핵 협상대표인 우다웨이를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 측과 탐색 대화를 시도하였다. 단, 북한은 미사일 발사공개로 현 국면이 여전히 고강도 대립국면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다시 막대한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중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응을 해 줘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므로 당분간 북한에 대한 압박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이나 환구시보의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단, 북한은 단기적으로 이에 호응할 개연성이 적어 중국에 지속적인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할 것이고 한중 관계 역시 그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

북한은 사드관련 한중 및 미중의 갈등 국면을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다. 신냉전의 도래가 북한의 생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우군의 확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동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리라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과 직접적으로 갈등하는 신냉전 구도로 진입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된 국면을 희망하고,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양국관계 개선의 동력을 여전히 존재한다. 시진핑이 완전히 권력을 공고화하는 제19차 당대회(2017.10)까지 중국의 대북 정책의 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 노력하면서도 대체로 다소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많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대북 정책을 놓고 많은 고심과 논쟁이 더 가열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현 미국 중심의 북핵 대응 구도에서 중국 중심의 북핵 대응구도로 바꾸려 시도하는 것이다. 현재는 북한이 핵개발을 진전시키 나가면서 중국의 안보 전략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면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중국 책임론만 부각되는 구도이다.<sup>48</sup> 시진핑은 이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북중

<sup>48</sup> 김홍규, “북핵 공정의 시작인가,” 『국민일보』 2016년 6월 6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55947&code=11171395&cp=du>> (검색일: 2016.6.8.).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 관련 양보를 받아내고, 현 제재와 대립구도를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구축하고,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의 5월 31일 방중은 아마 이러한 중국의 대담한 전략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주요한 시도일 수 있다. 이는 북중 관계 개선이 옵션이 아니라 상수가 되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추세로 보자면, 중기적으로 그리고 제3의 대안으로 중국판 ‘전략적 인내정책’을 한반도에 대해 적용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관심 역시 한반도 보다는 국내문제가 주관심이고, 점차 일대일로 전략의 전개에 따라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가능하면 관리위주로 전환하고 싶은 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외적인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3. 미중 관계

중국과 미국은 21세기 들어 협력과 경쟁이 결합한 복합적인 경합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에 제시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내용 중 서로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데 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경제, 핵 비확산, 기후변화, 테러, 환경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 우주 영역 등지에서는 경쟁과 알력이 협력의 측면보다 두드러진다. 미중 간의 강대국 관계가 기묘한 균형점을 찾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핵확산 방지와 지역 안정이란 측면에서 미중은 공동으로 협력하면서도 북핵 위기와 연관된 북한 문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sup>49</sup> 즉,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간에 합의의 영역인지 아니면 경쟁의 영역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반도 문제는 향후 미중 전략 경쟁관계의 풍향을 읽을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남을 것 같다.

이제까지 오바마-시진핑의 회동에서 한반도 문제는 항상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4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 이러한 합의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일단, 사드 배치를 잠정 연

<sup>49</sup> 이를 중국 측은 한반도에서의 전략호동(戰略互動)이란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陳宗權, “朝核問題上中美戰略互動關係的轉型,” 『社會科學』, 2014年 10期.

기하는 데 미중은 상호 묵시적으로 동의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2016년 3월 31일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 시진핑 참석을 위한 전술적인 양보였는지 아니면 보다 본질적으로 미중 전략협력의 차원에서 다뤄졌는지가 아직 불확실하다.

최근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미국은 한국 내 사드의 배치는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 전략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향후 더 강화해 나갈 의지를 사드 문제를 통해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추후 한반도 문제가 결코 한국이 희망하는 데로 미중의 전략 협력 안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전략적 관계의 정황이 사드 문제를 계기로 협력위주에서 경쟁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던 간에 미중의 시각에서는 전략적 경쟁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에 전략적 균형을 깰 사드의 한국 내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한반도는 다시 미중 간 갈등이 발화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설 것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 V. 결론

한국 외교는 21세기의 한반도 및 국제 환경의 본질에 대한 이해, 향후 어떻게 한국이 살아야 할지에 대한 원칙과 비전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 의미의 안보와 포괄적 의미의 안보 사이의 명민한 사고가 요망된다. 21세기 국제관계는 전통적 안보 문제로 망하는 나라보다, 경제로 파산할 나라가 나올 개연성이 더 큰 것도 현실이다.<sup>50</sup> 현재 한중 관계는 안보 및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엄준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불신은 확대되고, 경제 협력은 급속히 줄어들고, 안보에서는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는 갈림길에 놓여 있고,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병존하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은 전에 비할 데 없이 중요한

<sup>50</sup>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가 2015. 4. 8일 국립외교원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

관건적인 시기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향후 중국의 부상 및 변화하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 경제-안보 연계상황에 대한 이해, 여기서 빵과 대포의 황금비율에 대한 고민이 보다 진지하게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북핵 실험을 계기로 적극 제기하고 나온 한국 내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 국익에 합당하고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비전에 부합하는 것인가? 북한의 실제 위협 평가, 사드 배치의 합당성 문제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좀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매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이점과 비용(기회비용 포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드 논란과 배치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엄중한 이슈란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미중 관계의 본질이 변하는 지를 판단하는 시급성이 되고 있다. 미중은 남중국해에서는 격렬히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상호 위기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이제 미중 간 갈등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만큼 불안정성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 전제되었던 협력의 영역만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이번 사드 논쟁이 암시하는 바다.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드 문제가 한·미·중 대립의 사안이 아닌 적어도 타협, 더 나아가 협력의 사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원칙에 있어서 미·중·한 간의 소통과 전략적 이해 맞추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미중이 우선적으로 전략 대화를 통해 다루도록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한국도 이 문제가 지나치게 대중국 견제용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적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미중 대립이 아닌 협력 사안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불가피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중국의 이해를 가능한 한 배려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의 정책결정시 낙관론에 기대기보다는 중국의 대응조치를 먼저 감안한 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북한은 이미 사드문제로 미중, 한중, 한러 간 관계를 갈등상황으로 만들면서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즐기고 있다. 배치 이후에도 엄청난 고비용은 발생하게 하면서도 실제 북한을 위협하지는 못해 북한이 결국 선택권을 갖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사드 논란의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이 될 수 있어서 이러한 여건을 형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합당한 한미동맹’의 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가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한정’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하고 합의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지니는 부가적인 기능인 지역안정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용하는 ‘지역동맹화’ 하는 것은 동맹의 이익을 초과할 우려가 다대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 동맹을 최대한 동원하여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사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판단의 근거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한미 관계에 동상이몽과 불협화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성동격서(聲東擊西)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고, 득보다 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개연성이 다대하다.

최근 사드논란에서 보여준 미중 관계의 흐름을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정도 희생하더라도 최대한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그 시급성이 될 것이다. 중국은 적어도 그리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강대국 정치, 북한의 농간, 신 냉전질서의 도래, 탐욕스런 국제 자본의 탐닉대상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

■ 접수: 5월 2일 ■ 심사: 5월 16일 ■ 채택: 5월 31일

## 참고문헌

### 1. 논문

- 고봉준. “21세기 미국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동맹 전략.” 『변화하는 한반도의 국방과 외교정책의 새로운 모색』. 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2016).
- 김진향. “사드 배치, 북한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가.”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 김홍규. “중국 동반자외교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2호 (2009).
- 미국의 소리(VOA) 방송. 2015년 3월 22일.
- 박근재.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합의.” 『전략연구』. 제23권 제5호

- (2016).
- 박취락.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 편향.” 『전략연구』. 제23권 제5호 (2016).
- \_\_\_\_\_.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 『국가전략』. 제21권 2호 (2015).
- 정옥식. “사드, 북한미사일 막을 수 있다.”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 최재천. “세미나 자료집.” 『사드 모순』. 2015.4.16.
- 최지영·김홍규. “사드 도입논쟁과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 『아주대 China Watching』. 제14호(2016. 04).
- 하주희.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 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료집 (2016.2.17.).
- 仇發華. “新時期中國朝鮮半島戰略調整的變化, 動因與趨勢.” 『國際關係研究』. 2014年 06期.
- 金龍. “朝核危機, 中國不出賣朋友也絕不護短.” 『東北之窗』. 2016/3A.
- 獨孤九段. “美韓的薩德反導系統, 對中國威脅到底有多大.” 『中國經濟周刊』. (2016. 02. 22).
- 羅援. “中國在半島的安全關切應得到各方重視.” 『軍事文摘』. 2016年 4期.
- 王俊生. “新時期發展中韓安全合作的意義、障礙與方向.” 『東北亞學刊』. 第1期, (2016. 01).
- 劉江永. “朝鮮半島局勢與東北亞可持續安全.” 『東北亞論壇』. 第3期(2016. 04).
- 張良. 美軍半島“舞劍,” 意在構築“亞太反導網.” 『生命與災害』. (2016. 03).
- 張相國. “美在韓部署“薩德”分析.” 『兵器知識』. 4期 (2016).
- 朱風雲. “美國陸軍反導利器: “薩德”系統發展.” 『軍事文摘』. (2016. 04).
- 陳宗權. “朝核問題上中美戰略互動關係的轉型.” 『社會科學』. 2014年 10期.
- 鄒治波. “美國謀求在韓部署“薩德”系統的戰略意涵.” 『當代世界』. (2016. 04).
- 畢穎達. “深化中韓戰略合作夥伴關係的空間, 挑戰及應對.” 『東北亞論壇』. 2015年 02期.
- Green, Michael. Kathleen Hicks, Mark Cancian, Asia-Pacific Rebalance 2025: Capabilities, Presence, and Partnerships, CSIS (January 2016).
- Kim, Heungkyu.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XII, No. 1, Spring 2010.

## 2. 기타자료

- 『국민일보』.
- 『동아일보』.
-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일뉴스』.

『한겨레신문』.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6-01/8327218.html](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6-01/8327218.html).

<http://www.dooo.cc/2016/01/40356.shtml>.

<http://www.fmprc.gov.cn/web/wjbzhd/t1359733.shtml>.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079427.shtml](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079427.shtml).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48>.

## Abstract

# North Korea's 4<sup>th</sup> Nuclear Test and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THAAD Debates

*Heung-Kyu Kim*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the issue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became brisk in the aftermath of North Korea's 4<sup>th</sup> nuclear test. It also seeks to analyze why China so vehemently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THAAD system onto the soil of South Korea and its consequenc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It almost took 50 days to reach consensus on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fter the nuclear test until Wang Yi, Chinese foreign minister, and John Kerry, U.S. Secretary of the State department, dramatically made agreements.

In the meantime, the Korea issue has been the symbol of the consensus-building efforts 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However, the THAAD issue is likely to be a tipping point of changing the nature of the complex relationship. The U.S. revealed its intention to strengthen strategic competition against China in the future. This implication casts negative outlook for South Korea in which Korea issue would be handled in the context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In this vein, China is much likely to take firm stance to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THAAD which allows the U.S. to have a strategic advantage in this region.

In this case, Korean peninsula turns into a space for the U.S.-China conflicts. In the coming future, South Korea may face a tremendous challenge in foreign policy, on the one hand, du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THAAD for the relationship with China.

**Key Words:** THAAD, Strategic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North Korea Nuclear Test, Sou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